

부처님오신날 사면 멸빈자 포함 시사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 기자들과 간담

사면에 대한 중정 교시 및 원로회의의 유시로 시행 여부 및 범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멸빈자의 사면 대상 포함 가능성을 시사했다. 3월27일 교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다. 25일 157회 임시총회 중정연설에서 부처님 오신날 사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서 한 발짝 더 나간 것이다.

법장스님은 27일 교계 기자간담회에서 "멸빈자는 현재 활동중인 사면검토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만약에 멸빈자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징계 이후 수행생활을 잘 한 사람들에게 한해 선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말은 멸빈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면 의지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현 집행부가 멸빈자 사면범위 및 방침에 대해 방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과정이 쉽지않은 않아 보인다. 법장스님은 3월25일 열린 중회에서 총무정책을 밝히는 중정연설을 통해 "중정스님과 원로회의의 유시를 받드는 사면복권 동의안을 시일이 촉박해 (이번 중회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총무원의 결의로 집행부와 식견있는 중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면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고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사면동의안이 마련되는 대로 중회에 상정해 오는 부처

님 오신날 좋은 결과가 발표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함축돼 있다. 우선 멸빈자를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흔적이 배

해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넘어야 할 가장 높은 산은 중헌 개정이다. 중헌개정없이 멸빈자 구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멸빈자들의 사면복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

징계이후 수행생활 좋은 스님들에 한정

중헌개정·반대 정서 '넘어야 할 산'

어있다. 사면검토위원회는 중정연설 이를 전인 23일 이미 구성됐다. 이는 멸빈자 문제 처리를 위한 법률적 검토 및 의견수렴을 위한 것이다. 이번 중회에 사면복권 동의안을 상정하지 못하고 늦어지게 된 것도 바로 여러 가지 절차와 의견을 종합

도 해소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중정 교시와 원로회의의 유시가 있었지만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멸빈자 8명에 대한 '징계 확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나오면

서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98,99년 징계자 가운데 멸빈자는 8명 가량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정우, 원학, 성문, 현근, 현소 스님 등 5명은 초심과 재심에서 멸빈 징계를 받은 뒤 다시 재심사를 청구, 당시 중회는 특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몇 차례 논의를 거쳤다. 그러나 99년 당시 총무원장이던 고산스님이 '총무원장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패함에 따라 특별심사위원회는 유아무효였고, 재심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총무원이 '아직도 특별심사위원회는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일각에서는 '재심사만으로 멸빈징계가 철회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총무원과 호계원은 이같은 견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이미 징계는 확정된 상태고, 다만 재심사에서 구제방법을 찾겠다는 취지에서 특별심사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재심사는 징계철회 또는 경감에 대한 결정권이 없고, 현 상태에서 이들을 구제할 방법은 오직 중헌개정 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사면은 법장스님 말대로 부처님 오신날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멸빈자 포함은 어떤 상황에서든 중헌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쉽지않은 않아 보인다.

한명우 기자 mwuhan@buddhapia.com

총책자문위 구성 종단 대계 수립

법장 총무원장 한달...일문일답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총무원장에 당선된 지 꼭 1달 만에 교계 출입기자들과 만나 그동안의 소감과 사면 문제 등 종단 현안 및 향후 종단 운영방향을 밝혔다.

▲당선 후 한 달간의 소감은?

—총무원장의 사회적 지위와 위상에 대한 새로운 느낌도 많았다. 그런 만큼 책임이 더 무거움을 느낀다.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종단 현안은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일이다. 또한 종단의 미래지향적인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그래서 총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종단의 백년대계를 설계할 계획이다. 대정부특별위원회도 구성할 것이다.

다 규모도 커지고 시대적 역할도 크게 늘었다. 문제는 종무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는가 하는 것이다. 94년 개혁종단 이후 올해로 10년째를 맞는다. 조직을 재검토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종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불

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다면 바꿀 것이다. 제도개혁을 단순히 시스템 변화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승려노후복지 문제만 해도 중헌중정에는 제도적으로 복지시설을 두도록 돼 있지만 실체는 없다. 사찰 기체승인이 남발되는 것도 막을 것이다. 기체승인이 남발되면 종단이 빛더미에 앉게 된다.

▲정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대응해

비구니부 신설 인적 자원 활용 확대

대정부 특별위 구성 불교계 입장 관철

▲비구니부 신설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다. 비구니가 승단의 절반이다. 종단 인적 자원의 반을 차지하지만 역할을 주어져 있지 않다.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확대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중회 중정연설에서 사면검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대상자에 멸빈자는 포함되는가?

—사면 시기는 초파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멸빈자 포함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멸빈자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징계 이후의 수행생활과 징계 과정 등을 종합해 선별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98,99년 멸빈 징계자에 대한 징계 확정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현재 검토중인 사안으로서 말하기는 곤란하다. 확정됐거나 그렇지 않다고 말할 사안이 아니다. 다만 중정 교시와 원로회의의 유시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총무원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다.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개선해야 할 점은 많다. 과거보

나갈 생각인가?

—선거 당시 공약했던 대로 대정부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정부 창구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현안이 되고 있는 문화재위원회에 불교계 전문가가 포함되는 문제 등을 비롯해 불교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5일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께서 총리 주관 하에 북한산, 천성산 문제를 챙기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노선검토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종단 차원에서 참여할 의향이 있나?

—아직 정부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 다만 노대통령이 선거 당시 공약했고, 또 당선 후에도 백지화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그렇게 되리라 믿는다. 검토위가 사실없이 일을 처리하겠다면 참여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이리크 전쟁에 대한 반전여론이 높다. 이에 대한 입장과 정부의 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불교의 제일 계율은 불살생이다. 어떤 명분으로도 전쟁은 합리화될 수 없다. 정부는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진정한 한미관계는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야 할 것이다.

한명우 기자

두 단체 양보와 종단 의지가 관건

조계종 중앙·전국신도회 통합 원칙적 합의

조계종의 양대 신도단체인 중앙신도회와 전국신도회가 하나의 신도회로 통합하기로 3월 20일 합의했다.

그동안 통합의 대전제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통합절차 등에서 이견을 보여 통합을 이끌어 내지 못한 수차례의 전례에도 불구하고, 선진구 전국신도회장과 백창기 중앙신도회장은 '하나의 신도회' 원칙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이 배석한 자리에서 합의서에 서명했다.

중법 개정·통합 절차 등 후속조치 남아

두 단체 대승적 양보·총무원 협조 필요

이번 합의조항에는 명칭을 조계종 전국신도회로 하고 사단법인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과 사무국 통합, 이사 인원을 55로 한다는 등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통합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특히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의 강한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장스님은 취임을 앞두고 두 단체의 통합의 당위성을 알렸고, 3월 20일 신도단체를 순방하는 자리에서 통합 서명

을 끌어냈다. 3월 25일 열린 취임법회에서는 "양 조직을 통합해 대중적인 신도활동을 활성화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따라 중앙신도회와 전국신도회는 통합을 위한 내부 의견조율에 들어갔다. 중앙신도회는 회장단과 상설위원장, 부서장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를 1일 개최해 향후 신도회 방향과 통합 절차 등을 논의하는 한편, 이날 대의원총회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전국신도회도 10일 김해

봉화산 정도수원원에서 대의원총회를 열어 통합을 추진 받을 예정이다.

양 단체의 합의 추진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양 단체가 통합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감하고 있는 데다가 내부에서도 통합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양 단체는 올해 부처님 오신날 이전에 통합을 마무리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신도법상 규정되어 있는 중앙신도회 명칭 변경, 전국신도회의 법인을 유지할 경우 법률상 문제, 사무국 통합 문제 등 통합을 위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구체적인 통합절차 논의를 위해 필요한 통합추진위 구성도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두 단체의 대승적인 양보와 조계종 총무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7년 중앙신도회가 창립때 양분을 맞은 이후 통합을 시도했던 수차례의 전례를 교훈삼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48년의 전통을 이어온 전국신도회의 정통성과 전국 본·말사 신도회 조직을 갖춘 중앙신도회의 조직력을 통합한 조계종의 대표 신도단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머리만 있고 몸과 발이 없는 신도회'라는 오명을 벗고, 서로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살려 대승적인 화합의 정신으로 새로운 재가운동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새롭고 정갈한 음식점

삼청동 고조선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한식 일품요리로 건강을 지킵시다

사전 전화예약 : 02)732-7355

삼청동 우리은행 뒤편(우리은행 주차장 이용)

국래민안 단종 추모 영산대재

국래민안 단종 추모 영산대재를 통해 불자 여러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영산대재는 불어가지시든 모든 고혼들의 넋을 위로하여 극락왕생 하길 기원하는 불교적 의식입니다. 이번 단종추모 영산대재는 불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길 바라며, 단종추모 영산대재에 동참하시는 분들에게는 불자 여러분의 넋을 위로하여 극락왕생 하길 기원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장엄한 영산대재를 통해 모든 단종추모 영산대재의 의미를 세우고 불교적 의식을 통해 모든 고혼들의 넋을 위로하여 극락왕생 하길 기원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단종추모 영산대재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을 초청해 모시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과 후원으로 거리를 빛내주시길 양원합니다.

불기 2547년 3월 1일

장소 : 보덕사 극락보전 앞

일시 : 2003년 4월 6일 오후 1시~4시

문의 : 033)374-3169

*영산대재 당일 오시는 분들께 보덕사에서 점심은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 1부 13:00~14:00 장소 : 장릉 내 단종제각 앞
시련 - 제불보살님과 단종 영혼을 모신
- 단종 영혼을 장릉 제각에서 보덕사 경내로 이운
- 분향 : 시련의식 중 각 단체별, 개인등 분향
- 이운 : 시련행렬순서대로 장릉에서 보덕사로 이동

제 2부 14:00~15:00 장소 : 보덕사 경내
현공 - 제불보살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
- 천수경(다같이)
- 의식 : 바라춤, 나비춤, 화청(영가축원)
- 육법공양 : 부처님께 여섯가지 공양물을 올리는 의식(지역, 단체, 개인등)
- 축원 : 연합회 회장 스님

제 3부 15:00~16:00 장소 : 보덕사 경내
시식 - 거불
- 청혼
현작 : 연합회 스님 및 단체장 등 순서별
추도문 낭독 - 군수님

제 37회 단종 추모 영산대재